우암학원 창학69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978호 1판 (음력 3월 6일)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반입 중단 광주시, 법적대응… 줄소송 번지나

광주SRF시설은 무용지물 전락 최고 133억원 손해 발생

광주에서 생산한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중단과 관련, 광주시가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SRF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이 중단됨에 따라 거액을 들여 조성해놓은 광주SRF생산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등 최고 133억원(최대 추정치)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와 공론화를 통해 가동 여부를 결정키로 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줄소송'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정빛고을(주)이 "광주SRF생산시설 가동중단으로 폐기물 매립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해놓은 'SRF 수급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지난 1일 '보조참가'형식으로 참여했다. '소송 보조참가'는 손해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는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의 한쪽 당사자 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폐기물을 매립하는 대신 청정빛고을(주)에 맡겨 SRF를 생산하고, 청정빛고을(주)은 생산된 SRF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었다.

청정빛고을(주)은 앞서 지난해 5월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SRF 수급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난방공사도 같은 해 나주시를 대상으로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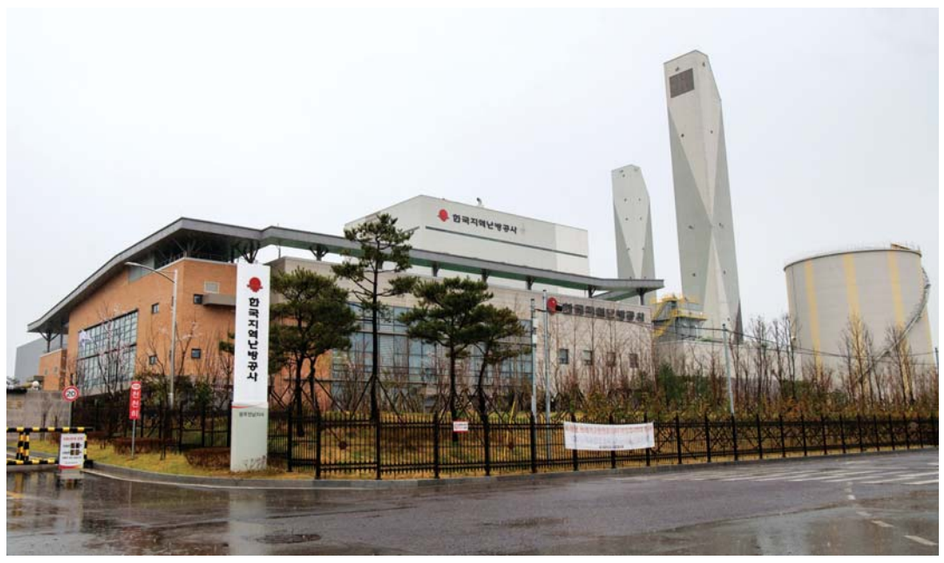
광주시가 이 소송에 '보조참가' 방식으로 참여키로 한 것은 청정빛고을(주)이 승소하도록 도운 뒤 배상금의 일부로 광주시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일(2018년 1월)로 부터 3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소송 보조참가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광주시는 특히, 협약 당사자인 청정빛고을(주)에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정빛고을(주)에 투자한 금융기관 등이 "소송에 따른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청정빛고을(주) 투자자들이 채권을 회수하면 광주 SRF생산시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정빛고을(주)에 투자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면 광주SRF 사업은 해지될 우려가 크다"면서 "보조참가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고, 광주시의 손해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비 453억원과 청정빛고을(주) 493억원 등 총 946억원을 들여 1일 400t 생산 능력(2기)을 갖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2017년 1월부터 가동했다. 광주시는 투자 공모를 통해 한국난방공사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SRF 반입에 반대하는 나주 지역민의 반발로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 3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가동이 중단되면서 광주 공장도 2018년 2월부터 멈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에서 생산한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중단으로 광주 SRF생산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등 최고 13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가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 가구당 연 158만원 절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 2학기부터 고3 학생부터 무상 교육을 도입하고 2021년까지 전체 고교생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고3에 대한 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고2는 내년부터, 고1을 포함한 고교 전학년은 2021년부터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2학기가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실제 소요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수 변동과 관계없이 실제 소요액만큼 예산확보가 가능해 정부 부담분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5%를 제외하면, 남은 47.5%는 교육청에 예산 협조를 구해야 한다. 당정청 방안대로면 2021년에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1조9951억원이 소요되는데, 17개 시·도 교육청이 946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세수가 감소해 지방교부금이 다소 줄더라도 교육청의 총 예산을 고려하면 무상교육 재원은 큰 부담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이미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사업 등으로 5380억원 외에 매년 4078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된다며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시·군 추진 대규모 사업들 중앙투자심사 무더기 재검토 판정

전남도와 각 시·군이 추진하려는 대규모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무더기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재검토 대상이 되면 재원조달 방안, 사업 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실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11개 사업 중 5개를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300억(시·군 200억) 이상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애초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잡월드 건립(순천)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영광)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완도·진도)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전남도) ▲선소테마정원 조성(여수) ▲용계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순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광양)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완도) ▲도민발전소 건립(전남도) ▲세계유산 화순고인돌 방문객센터 조성사업(화순) 등 11건을 올렸다.

행안부는 그러나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여수 선소테마정원, 순천 용계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전남의 주요 사업이던 수묵비엔날레의 경우 국비 지원 계획 확정 후 가용 재원 범위를 고려한 사업계획 조정과 행사개최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관람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편의·수익시설 설치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소테마정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토대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순천 용계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사업은 객관적 수요 산정과 수지전망에 대한 재분석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이들 사업이 전남도와 시·군의 주요 역점 사업이라는 점에서 무더기 재검토 판정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 현안 사업임에도 사업성 분석과 경영 전략, 개발 타당성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논리 개발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로버트 할리 필로폰 투약 체포
광주 외국인학교 잇단 마약 추문 ▶6면

한국영화 100년 - 1960년대
아버지의 버거운 삶 가족영화 단골 메뉴 ▶18면